

대법원 2017다242409 부당이득금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8. 7. 19.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8. 7. 17.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4명(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의 반대의견이 있음.

1. 사안의 내용

- 원고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귀속분 각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을 받고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임
- 한편 대법원은 2015. 6. 23.경 관련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 계산식에 관한 법리를 밝히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그 관련사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원고의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면, 원고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음이 밝혀졌음
- 그러자 원고가, 자신에 대한 각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전부가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2009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 각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으로 납부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사안임

-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과세처분을 어떤 경우에 당연무효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면, 납세자는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때에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에 대한 불복절차나 행정소송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 원심은, 각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중 관련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의 부과처분인 2015년 귀속분에 한하여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음
- 원고는 각 과세처분 중 원심이 당연무효로 인정하지 아니한 귀속분에 대하여 불복하였고, 피고는 원심이 당연무효로 인정한 귀속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각 상고를 제기하였음

2. 대법원의 판단

가. 다수의견(9명) :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하자의 명백성이 없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부정 → 상고기각

- 종래 주류적 판례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 위한 요건으로, 과세처분에 있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른바 중대명백설의 입장을 취하여 왔음
- 이러한 입장에 의할 때,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있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기 어려워 해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
 - 즉,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

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임

■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2015. 6. 23.경 관련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과세처분에 적용된 법리가 명확히 밝혀진 이후이어서, 과세 법리가 잘못되었다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었으므로, 2015년 귀속분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2009년부터 2014년 귀속분까지는 관련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의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나. 반대의견(4명) :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에도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긍정 → 원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의견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할 때, 과세관청이 과세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이 당시 과세 법리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었던 동안에 내려진 것이라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함

■ 국가는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을 충분히 명확하게 규정을 하여야 하고, 그 과세 법리가 명확할 때에만 과세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함. 법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됨

- 그런데도 과세관청이 불분명한 법령에 근거하여 과세를 하면서 그 과세 법리도 잘못 적용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거두고도, 과세처분 당시 법령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거둔 세금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해서는 아니 됨
- 특히 적어도 대법원 판결 선고로써 과세 법리가 잘못 적용되어 과세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법리를 적용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함으로써 잘못 거둔 세금을 납세자에게 반환할 수 있게 해야 함

3. 판결의 의의

- 대법원의 주류적 판례는 다수의견과 같이 이른바 중대명백설적 입장에서, 과세 법리가 잘못되었음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동안에는 잘못된 법리에 따라 과세를 하였더라도 해당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지 않았음
-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는, 잘못된 과세임이 분명하게 밝혀졌으면 그로 인하여 낸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그렇게 하기 위하여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고, 반대의견은 이러한 비판론을 반영하는 취지임
 - 과거 일부 판례도 보다 유연하게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한 사안도 있음
 - 이 사건에서 주류적 판례의 입장이 변경될 수 있는지가 다시 논의되었음
- 그러나 다수의견은 종래 주류적 판례의 입장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이고, 이로써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주류적 판례의 입장이 다시 공고하게 확인되었으며,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하급심에도 또 하나의 지침이 될 것으로 평가됨
 - 이 판결에서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잘못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과세처분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조세법에서 따로 인정된 불복절차에 따라 취소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였음